

<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보도자료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연구회는

2023년 5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정동에 소재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220호)에서

다음 내용으로 4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문의처: 연금연구회 총무

-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교수(010-3616-4895)

- 박명호 흥익대 교수(010-9316-9751)

##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

### 1. 일시 및 장소

- 2024년 5월 28일 오전 10시-13시,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220호)

### 2. 행사 진행 사회(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3. 토론회 좌장

- 이근면 성균관대 석좌교수(전 인사혁신처장, 사람들연구소 이사장)

### 4. 발표

- 전영준 한양대 교수(국민연금 개편안별 미적립 부채 규모 추계 결과)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연금연구회의 연금개혁 원칙과 개혁방향 - 재정추계결과 등에 기초한 정책제안의 논리적 근거들 -)
- 박명호 흥익대 교수(국민연금과 국가재정의 진실)
- 이강구 KDI 연구위원(국민연금 신규연금 분리 운영방안)
- 주명룡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대표(초노령사회 노후소득 확보방안 - “배벌사가 대안이다”)
-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의 국민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보충제도로서의 주택연금 개선방안)

### 6. 토론

-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재정추계 전문가)
- 김지영 이투데이 기자
- 박동석 아이뉴스24 사장
- 주정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청년대표 (김은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4학년)

## 1. 전영준 한양대 교수(국민연금 개편안별 미적립 부채 규모 추계 결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 추계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개편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을 44%로 높이는 경우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는 거의 변하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이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면 미적립 부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 수준이 현행의 제도하에서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편안들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도의 안정성에 기여하지 않을 것임. 연금 재정 안정화와 취약층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2.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연금연구회의 연금개혁 원칙과 개혁방향 - 재정추계결과 등에 기초한 정책제안의 논리적 근거들 -)

### 2.1 국회 공론화위원회 논의안 평가

공론화위원회는 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악안을 논의해 왔다.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의 핵심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10년 내에 보험료를 15%까지 인상할지라도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니 훨씬 미흡하다.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안’을 채택할 경우, 수지균형보험료인 21.8%까지 인상해야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가 없어진다. 제도 개편 이후에 매년 8.8% 포인트에 달하는 보험료를 적게 걷음에 따라, 매년 그만큼 부채가 발생한다.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안’이 2093년까지 누적적자를 3,738조원(경상가) 줄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시민대표단이 합의한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5년 상향 조정할 경우에는 **누적적자**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조정될 예정인지라, 의무납입연령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해서다.

## 2.2 연금연구회가 제안하는 연금개혁 방향

연금개혁을 명분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19.8%의 보험료(수지균형 보험료)**를 걷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4% -보험료 13% 조합’은 개악안이다. 13%가 아닌 **21.8%의 보험료를 걷어야만 소득대체율 44%에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 넘기지 않아서다**.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혁 논의를 하고 있는데, **부담을 더 많게 한다는 측면에서 개악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개혁이란 말을 붙일 수 있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추가적인 재정 안정조치는 핀란드식의 기대여명계수를 활용하여 2033년 이후부터 작동되도록 한다. 기대여명계수(Life-expectancy coefficient)를 도입하면, 평균수명 증가 추이에 맞추어 **기존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도 자동으로 삭감**될 수가 있어, **연금개혁에 따른 세대간 고통 분담이 가능**하게 된다. 보험료를 최소한 12% 이상으로 인상해 놓아야만, 제대로 된 **구조개혁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 3. 박명호 홍익대 교수(국민연금과 국가재정의 진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 관련 두 가지를 잘못된 환상에서 반드시 깨어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만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며, 품위있게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다는 환상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저부담-고급여라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급여의 결정요인 중 하나인 가입자의 소득 상한을 매우 낮게 설정해 놓았고, 평균 가입기간도 20년이 안 될 정도로 짧다.

그 결과 2023년 12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급여는 월 62만원 정도이다. 가입기간이 40년이며 자신의 평균소득이 소득상한 수준인 590만원일 때, 소득대체율이 40%(50%)인 경우 월 178만원(223만원)이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대비를 더 해야 한다. 이것은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 국제 표준이다.

두 번째는 국가재정이 국민연금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이다. 소위 소득보장파라는 그룹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2060년 12% 정도로 현재 선진국 수준이기에 우리나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한 그룹에서는 매년 1~2% 정도의 국고투입이 이루어지면 약간의 보험료율 및 기금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2021년 일반정부 부채 기준 우리나라는 51.5%이고 OECD 회원국 평균은 75.4%로 일견 가능해 보인다. 단, 미래에도 우리나라의 나랏빚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은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D1)이 현재와 같은 재정쓰쓰이가 계속된다면 228%를 넘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재정위험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국회예산정책처나 IMF의 추계에서도 일관되게 경고하고 있다.

또한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GDP 대비 매년 5~7%이며, 이를 누적하면 2090년 225% 정도나 된다. 결국 국가재정은 국민연금 재정의 구원투수가 될 수 없다.

#### 4. 이강구 KDI 연구위원(국민연금 신규연금 분리 운영방안)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신규연금 분리 운영방안]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기존세대가 낸 것보다 더 받아가는 것에 대해 미래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분리방안을 향후 모수개혁 논의에서 우선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적립기금 고갈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로는 미래세대의 보험료로 기존 세대의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재정방식인 부과식으로 전환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과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되어 있는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빠른 속도로 재정투입이 필요하나, 신규연금을 분리하여야만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고 2080년경에는 구연금의 재정투입의 종료 가능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5. 주명룡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대표(초노령사회 노후소득 확보방안 “배벌사가 대안이다”)

**배벌사:** 배우며, 벌며, 기여하며 사는 노령사회

장노년층 경제수명 늘리기 방안

정부	기업	사회
- 정책 및 제도개선 • 유연한 정년정책 - 노동시장개혁 •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 협력 강화 - 의료 및 건강관리	- 고령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재교육 및 역량강화 - 연령의 다양성 및 포용성강화	- 사회적 인식개선 (배벌사) - 커뮤니티지원 금융지원 및 교육

6.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의 국민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보충제도로서의 주택연금 개선방안)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은 현 세대의 이익증대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현재 및 미래세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제의 근원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연금급여산정식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험에 낸 것의 2배 전후의 연금을 받아가도록 설계되어 적립된 연기금의 고갈이 구조화 되었고, 당시 예측 못한 급속한 고령화로 고갈이 더욱 빨라진 것에 있다.

따라서 구조적 문제를 알면서도 임시적으로 결정된 국회 연금특위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모수조정안들은 기금고갈과 미래세대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 그리고 국가재정의 파탄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안으로 첫째, 국민연금제도는 미래세대를 위해 선진국들에서 선택한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로 전환하고,

둘째, 제도의 전환이행기의 수급자들의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세대간에는 분배 중립적이지만 세대 내에서는 재분배 구조를 장치하여 현 제도의 분배상태를 가능한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연금보충제도’를 일시적으로 신설한다.

셋째, 한국인들이 주로 의존해 왔던 주택을 부족한 생활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택연금’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의 상한가액 12억원을 폐지하고 고가주택의 부분 가입도 가능케 하며, 이자부담을 복리에서 단리로 전환 혹은 선택하도록 하고, 자손들에의 상속문제를 줄이기 위해 연금화된 주택의 상속세를 크게 완화해야 한다.

넷째, 현재 및 미래세대, 그리고 사회, 경제, 주택문제 등 다방면의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국민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을 개혁 열기가 식기 전 결정하여야 한다.